

‘시스템도 운전자’… 교통사고 책임소재·보험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단기 15건 등 총 과제 30건 담아
도로법·형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기준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선제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재설계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그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로드맵에는 단기 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여개의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한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과제로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

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안전운전의무와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도 사람을 전제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특히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과제에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지만,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사고기록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통신 표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과제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면, 이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 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또,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내린 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밸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아세안 교역 7.6% 증가… 연내 1600억 달러 넘을 것

신남방정책 추진 1년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예상
인프라 사업 수주 99억 달러 달해



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1년간 추진한 결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8일 서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현철 위원장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남방정책 추진 1년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 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했다.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

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 마켓 등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인프라 수주도 확대됐다.

위원회는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98억

9000만 달러(전체 수주액의 40.9%)를 기록해 85억7000만 달러를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8국과 20개국·20개의 중점 협력사업을 체택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와 외교·안보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와 외교 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지고 있다”며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だ”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내일 中 농업장관회의 참석

농업협력 확대 한중일 장관급 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사진)이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역내 현안을 논의하고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해 설립된 3국간 장관급 협의체다.

이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긴급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이 장관은 10일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ASF, 붉은불개미 등 최근 동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식물질병 공동 대응을 위해 3국 장관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동식물질병 공동 대응 이외에 농촌진흥, 친환경 농업, 식량안보, 역내 농업협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별 협력 방안과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농업 현안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인 ‘동물의 위생검역 협력 협정’ 체결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ASF, A1, 구제역 등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공식 일정 종료 후, 베이징 현지 농식품 판매장을 방문해 한국 농식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와 중국 현지 바이어·진출기업·유관기관이 함께 대중 농식품 수출 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산업부 국표원

자율주행차 표준화포럼 출범

정부가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주도 국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계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은 자율차의 6대 표준화 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등)에 2021년 까지 국제표준 20건을 제안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6대 기술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정보 공유 및 선도적 국제 표준 제안,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화의 전략적 연계,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9~10일 농업인의 날 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9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의 날 표어는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로 정했다.

기념식은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무총리, 농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소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폭염·태풍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풍성한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격려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전통주업체인 ‘솔래원’의 이인한 대표에게 수여된다.

/세종=최신웅 기자